

문재인 정부, 노동개약 강행 처리에 박차

한국노총은 파업에 나서야 한다

- 탄력근로제 확대 + 특별연장근로 + α
-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
- 최저임금 인상 억제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약 강행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국 사태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위기에 처한 정부는 기업주들의 지지를 구하려고 친기업 행보에 적극적이다.

문재인은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개약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터뜨리는 재계의 요구에 적극 응답한 것이다.

지난 한 달여간 문재인의 행보는 거침없다. 10월 4일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거듭 탄력근로제 개약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11월 10일 여·야 5당 대표 만남에서도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조했다.

문재인은 또, 삼성과 현대차를 찾아 재벌 총수들의 기업 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내년도 예산안도 기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데이터3법과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규제 완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10월 11일에는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탄력근로제 개약안을 의결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약에 반대한 경사노위 계층별 위원들을 해촉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교체하는 불명예를 감수하고서야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이는 경사노위가 노동개약을 위한 '답정너' 기구임을 재확인시켰다.



지난해 11월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개약 3종 세트

급기야 10월 21일, 서로 물어뜯고 싸우던 집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노동개약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

현재 여야는 11월 19일 노동개약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집중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와 민주당은 재계·한국당의 '더 개약' 요구에 적극응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개약에 더해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적용 제외) 확대를 수용했고, 선택근로제 확대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수개월간 다른 쟁점을 놓고는 진흙탕 개싸움을 벌이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임을 다시금 보여 준다.

당면한 노동개약 법안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임금, 단결·행동권을 공격하는 것들이다.

정부·여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ILO 기본협약 비준을 빌미로 되레 노동자들의 저항권을 제약하려 한다.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이 같은 개약안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파탄을 상징하는 대표 입법으로 꼽혀 온 것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노동자들의 상당한 반발을 샀다.

발목 붙잡는 민주당 차악론

그럼에도 문재인은 한일 갈등과 조국 사태 국면에서 노동계 대표 조직들을 정부 지지로 붙잡아 둘 수 있었다. 우파의 부상을 막으려면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차악론이 퍼진 결과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영논리는 우리 쪽의 저항 태세를 약화시켜 개약을 막는 데도, 우파의 부상을 막는 데도 해악적이다.

집권한 민주당은 늘 이전 우파 정부들이 실패한 노동개약을 마저 완수하는 구실을 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가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를 밀어붙였고, 노무현 정부가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을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가 못다 한 각종 노동개약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문재인 정부에 단호히 맞서길 주저해서는 안 된다. 패스트트랙 등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의 갈등 때문에 노동개약이 지연되길 바라면서 추후 총선 대응과 연결해 대응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봐서도 안 된다.

세계적인 장기 경제 침체 때문에 노동개약에 대한 한국 지배계급의 의지는 굳건하다.

노동개약이 임박한 지금, 한국노총 지도부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기 위해 파업에 나서야 한다.

노동시간, 임금, 단결·행동권 공격하는 노동개악 3법

● 탄력근로제 확대 + α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의 한도를 늘리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도로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연장근무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임금 손실도 크다. 한국노총 지도부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해 준 것은 잘못이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정 노동시간의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현행법은 천재지변 등의 제한적 사유에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 적용 기준을 완화해 주 52시간제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에 임금 인상 폭의 구간을 미리 설정하는 사전 단계를 만드는 것.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 저임금 노동자들을 고통에 내둔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산산조각 났다. 올해 초에는 최저임금 줘다 빼기 개악을 하더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 노사관계법 개정

노동기본권의 보장은커녕, 오히려 ILO 기본협약 비준을 빌미로 사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자들의 저항권 제약이 핵심 내용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조 설립신고제 개선 등도 아예 빠져 있다.

한국노총 현장연석회의 노동개악 규탄 성명

“한국노총 지도부는 투쟁에 나서라”

한국노총 소속의 일부 노조 대표자·활동가들로 구성된 ‘한국노총 현장연석회의’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을 규탄하며 한국노총 지도부에 투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장연석회의는 한국노총 제조 부문 노조 활동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추진과 당시 한국노총 지도부의

야합을 비판하고 항의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후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여파 속에서 2018년 1월 현장연석회의를 결성했다.

이번에도 현장연석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에 분명히 반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시대적 과제이자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인 노동시간 단축을 근본에서부터 허물어뜨리려 한다”고 규탄하

며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비판했다. 한국노총 지도부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해 준 것과는 대조되는 올바른 입장이다.

현장연석회의가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하겠다고 결의를 밝히는 한편, 한국노총 지도부에도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를 방조하지 말고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무노조 삼성전자에 노조 출범

삼성전자에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11월 16일 출범한 삼성전자 노조에는 현재 노동자 400여 명이 함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불통과 단절의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노동조합!” 삼성전자 경기 화성공장 정문 앞에는 노조 가입을 호소하는 대형 현수막도 걸렸다. 경기도 기흥과 평택·화성 반도체 사업장 노동자들

이 노조에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핵심 공장들에서 노조가 설립된 것은 매우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2016~2017년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여파로 지난 1~2년 새 노조 결성과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사측이 오랫동안 ‘무노조’ 전략을 구사해 온 삼성에서도 노조가 하나둘씩 늘어 왔다.

물론 사측의 탄압으로 무산되거나 소수노조로 고립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보여 주듯이,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하면서 처우를 개선하고 조직을 확대할 수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연대 투쟁을 전진시키며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노동자연대 최신회 주요기사

- ▶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방한 강연 SNS 시대에도 혁명적 종이 신문이 필요할까?
- ▶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제 “동일임금” 미명 아래 추진되는 임금 억제책
- ▶ 올해 노동자 투쟁은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제시하는가?
- ▶ 문재인 정부,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 ▶ 칠레, 홍콩, 카탈루냐, 레바논... 세계적 위기는 세계적 반란을 추동하고 있다
- ▶ 비정규직 정책 파산
- ▶ 철도 파업 예고

집회 현장에 있는 <노동자 연대> 부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 1,000원

매주 발행되는 지면 신문과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ws@wspaper.org 전화: 02-777-2792

wspaper.org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주소 (시/군/구까지) _____
 소속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_____

회비약정액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아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이메일 mail@workersolidarity.org